

# 이건희+최송옥+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탄생

## 태평로



이 하원  
논설위원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이 서울 신촌 캠퍼스가 아니라 청와대 뒤편 부암동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광화문에서 택시를 타고 자하문 터널을 지나자마자 내려 45도 경사의 좁은 길을 올라가니 '이승만연구원' 문패가 달린 건물에 나타났다. 오래된 2층짜리 저택을 개조한 연구원은 거실부터 이승만 관련 서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의 핵심부는 2층 한가운데 위치한 수장고 이승만 관련 15만 건의 문서, 1만9000장의 사진이 소장돼 있다. 향은, 방송 기능의 첨단 장비가 24시간 작동 중인 가운데 이승만이 1903년 옥중에서 읽은 영어 성경책을 봤을 때 잠시 감동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190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쓴 추천서도 있었다. 국보급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원이 지금까지 출간한 이승만 관련 서적이 91권이다.

올해 들어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들이 '건국 전쟁'이 촉발한 이승만 재평가 열기는 30년 가까이 그에게 천착해 온 이승만연구원으로 부터 도 움받은 측면이 적지 않다.

이승만연구원이 연세대가 아니라 부

암동 주택가에 자리 잡고 활동해 온 배경에 이견희 전 삼성그룹회장과 독립투사 최기식씨의 딸 최송옥 여사가 있다. 이 전 회장은 1995년 조선일보가 1월 1일부터 '거대한 생애 이승만 90년' 장기 연재를 시작한 후 유영의 교수로부터 이승만 연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해 조선일보는 12월 26일까지 매 회 1개 면을 할애하며 이승만을 재조명하는 대형 기획을 총 65회 연재했다. 예술의 전당에서 44m의 대형 연보가 등장하는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전

李, 95년에 운영자금 50억 기부  
崔, 살고 있던 고가 저택을 기증  
연대는 91권 이승만 책 출간  
'삼각 협력' 모델 확산 기대

사회도 열었다. 조선일보의 이승만 장기 연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전 회장은 흔쾌히 50억원을 내놓았다. 이어서 2년 뒤인 1997년, 일제시대 이승만을 도왔던 독립투사 최기식씨의 딸 최송옥 여사가 자신이 살던 건물을 기증했다. 현재 이승만연구원 운영 자금, 건물이 확보되자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 박사가 이화장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모두 기증했다. 당시 이승만에 대해 써왔던 분위

기 때문에 현대한국학연구소 이름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2011년 류석춘 교수가 원장을 맡으면서 "왜 이승만 연구를 숨어서 해야 하나냐"며 독립한 후, 이승만연구원 현판을 내걸었다. 이승만의 호를 딴 우남(粵南) 학술회의도 개최하며 저변을 확대했다.

연세대와 기업인, 독지가의 노력이 합쳐서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무회의록과 이승만의 한시집을 포함, 100권 가까운 서적을 발간하며 이승만 열기가 확산되는 토대를 만들었다. '농지개혁 연구'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를 통해 이승만이 지향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성도 일깨웠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폄하하는 일부 좌파가 지식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승만 연구에 있어서는 물질, 질적으로 앞설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성금 모금 중인 이승만기념관이 세워지면 이곳에 전시될 자료의 상당수를 이미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승만연구원은 탐구 능력을 갖춘 대학, 산업으로 번 돈을 환원한 기업인, 뜻 있는 독지가가 힘을 합쳐 선(善)을 이룬 성공 사례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주목받는 국가가 된 배경에는 각계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이들이 많다. 이승만연구원이 보여준 3각 협력 이 각 분야에서 한국사회를 진전시키는 모범 사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 김준의 맛과 섬 [182]

### 부산 가장 학리 말미잘수육

말미잘을 손질하던 식당 주인이 입에서 낚시를 빼냈다. 봉장어나 가자미를 잡기 위한 주낙에 걸린 말미잘이다. 애초에 말미잘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새옹지마라고 했는가. 이제 말미잘 덕분에 부산에서 오지인 갯마을까지 사람들이 찾아온다. 아무리 칠암봉장어가 유명하다 해도 그것만으 로 학리를 찾지 않는다.

장어보다 가자미보다 유명한 말미잘은 풍선말미잘이다. 가장 지역 심해에 서식한다. 장어나 가자미는 올라오지 않고 말미잘만 잡혀 버리기도 했다. 우연하게 매운탕에 넣어 내놓은 결과 식감이 좋다는 반응에 수육으로 조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학리마을 말미잘 음식이 만들어졌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학리는 물론 기장을

상징하는 지역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젠 말미잘이 많이 잡히지 않아서 걱정이자. 작은 말미잘은 사육 정도 수족관에 넣어 둔다. 말미잘 촉수를 제거하고 먹는다. 말미잘말이 밥과 먹기 좋다면, 수육은 술안주로 최고다.

말미잘이 나오기 전에 전 계란, 미역귀, 살짝 데친 서실이 나온다. 계란은 소금에, 나머지는 초장을 찍어 먹는다. 그런데 말미잘의 식감과 뒷맛을 잡아주는 데는 초장보다 소금이 더 나은 것 같다. 모양은 비호감이지만 꼬들꼬들하며 부드러운 식감이 맛도 좋다. 양파와 파를 곁들여 소금에 찍어 먹어보길 권한다. 말미잘탕은 사계절 먹을 수 있지만 말미잘 수육은 지금이 좋다. 여름철에는 말미잘이 밖으로 나오면 쉬물러져 수육을 만들기 어렵다. 탕은 금방



말미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육은 살아 있는 말미잘이어야 가능한 탓이다. 식당에서 나오다가 장어를 굽는 안주인을 만났다. 혹시 말미잘도 굽냐고 물었더니 수육보다 굽는 것이 더 맛이 있단다. 다음에 말미잘 구이를 먹으러 오겠단다. 구이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말이면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는 데 구울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말미잘을 잡는 미끼로 청어, 정어리, 오징어 등을 이용한다. 학리 말미잘 식당은 모두 직접 어장을 하는 집에서 운영한다.

전남대 학술연구소

## 社 說

### “총선 지면 尹 정부 뜻 한번 못 펴고 끝” 알면서 이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제대로 펴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하고 맞는 말이다. 많은 국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윤 정부의 소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연금·교육·규제 등 핵심 개혁을 완수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이 구조 개혁이 미진하거나 없어서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 윤 대통령도 취임 때부터 흔들림 없이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거의 모든 개혁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소수 정부라 힘들다”며 총선에서 개혁에 필요한 의석을 달라고 호소해 왔다. 그런데 막상 총선이 되자 윤 대통령에게 개혁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어느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출국 전에 국민의힘에서 총선 직전 출국은 안 된다는 뜻을 전했지만 윤 대통령은 무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사를 귀국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도 거부했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상식에 안 맞고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일인데 윤 대통령이 이러는 이유를 참모들조차 잘 모른다고 한다. 대통령실 인콰에선 언론과 여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더 거꾸로 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씨는 8차레나 자신이 ‘윤 대통령의 1번 참모’임을 강조하며 무소속 출마했다. 무소속으로 여권 표를 나누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장씨의 무소속 출마를 권했다는 설이 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잘라서 부인하지 않으며 뭔가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고 대통령실도 아무 반응이 없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은 감동은 없고 뒷말만 무성하다. 비례대표는 인선 자체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스토리 있는 참신한 청년·기업인·전문가 등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생소한 공무원 두 사람의 공천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한 명은 하루 만에 취소됐다. 이 두 사람이 한동훈 비례위원장, 검사 출신 당 인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한 위원장은 “선거에 지면 끝”이라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이렇게 하나, 이래서 어떻게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지면 윤 대통령의 국정 개혁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벌써 과반 승리를 언급하며 ‘윤석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다. 실제 정치권에선 이들이 170~18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사실상 전멸했던 4년 전 총선의 재판을 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국민들은 선거를 대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개혁 약속이 진심이었는지 묻고 있다. 이대로 선거에 참패한다면 남은 3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엇을 할 것인가.

### 당선권 후보 10명 중 5명이 징역범·피고인인 정당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1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2번이다. 음주와 4차레 무면허 운전으로 4년 전 총선에서도 정의당 비례 후보에서 사퇴한 신장식 대변인은 4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8번을 받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10번을 받았다. 당선이 유력한 상위 10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징역형, 피고인, 피의자다. 비례대표 명부가 ‘범죄자 명부’다.

이들 외에도 한미 동맹을 ‘가스라이팅’에 비유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6번),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12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에 공개 입장을 낸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에 임명돼 ‘초고속 코드 승진’ 논란을 일으킨 김형연 전 법제처장(14번)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죄자뿐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까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조국 당에 물려들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런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조국 당에서 순차적으로 의석을 승계한다. 범죄자들이 국회를 도피처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의석까지 물려준다. 비례 위성정당 제도로 국회가 범죄 도피처로 되고 있다. 최소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대법원 형 확정 시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대통령 의료개혁 특위 주재, 의료제도 단일 대화 창구 필요

정부는 19일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의료계와 공·비·공공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삼급종합병원 등 병원 쪽과 23회, 의대교수협의회와 각 의학회 등과 6회, 전공의들과도 두 차례 만났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대표성 있는 창구와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대형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입장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 사항도 확인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은 의협을 불신하며 거리를 둔다. 의대 교수들은 기존 의대교수협의회와 이번 사태 이후 구성된 비대위가 나뉘어 따로 활동하

고 있다. 이러서는 제대로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의대 증원 규모 외에도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방안, 지역 의료 강화 방안,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등 중요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견도 없는 사안인데도 정부가 논의할 상대가 없는 것이다.

우선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대화 창구가 정부와 의료 개혁 문제를 하나 하나 논의해 가다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요청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의료계가 대화 창구를 구성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의료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직접 주재하겠다고 하니 의료계도 빨리 대화 창구 단일화를 이뤘으면 한다.

## 국민의힘은 비겁하다

### 한동훈, 도태우 내치고... 이재명, 양문석 끌어안고 [표현의 자유] 운운... 진정성 입증하라

배알도 없고 기개도 내다버린 국힘의 초라함 국힘 어중간파, 내부 총질 손익계산서 반계될 것 [표현의 자유] 운운 이재명의 위선도 가관 진심이라면, 선거보다 [이의신청]부터 철회하라

#### 누가 도태우를 죽이려 하나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취소한 것은, 그의 정치생명을 죽인 것이 나다름없다.

누가 죽였나? 좌파가? 더불어민주당이? 노(no), 국민의힘 안팎의 [강남좌파] 흐름이 죽였다.

####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 건드렸다고

그 흐름이 도태우를 죽이기로 한 데엔 구실이 있었다. 도태우가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① 그가 과거 평주민주화운동에 관해 한 연설 한 대목이 구실에 올랐다. 이 구실이 충분치 않았던지, 그리고 그나마 도태우가 진지하게 사과했기에, 일단 넘어갔다. 그러나 그의 5년 전 말이 또 트집 잡혔다.

② 도태우는 2019년 8월 3일 서울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굴종하고 반일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연설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보인 일련의 [기이한 행동]은 “혹자(或者)의 말대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였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일부는 이걸 [막말]이라고 물어붙였다. 그렇겠?

#### 이재명 "내 욕 많이 하라" ... 주객전도

같은 말도 주관에 따라 [막말]로 평가되기도, [막말 아님]으로 평가되기도 할 것이다. 이재명은 이걸 어떻게 볼까? 알 길 없다.

다만 한 가지 비슷한 사례를 놓고 이재명이 보인 반응이 자못 주목된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08년 5월 13일 자 [미디어스]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다.”

희한한 것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16일 하남시 신장시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했다고 정치

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내 욕 많이 하시라. 뭐라고 안 한다.”

#### 국힘 일부의 내부 총질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재명까지도 이렇게 [계몽된, 참으로 계몽된] 반응을 보이는데, 국민의힘 일부는 뭐라고? 적군 아닌 아군 도태우를 향해 [막말] 운운하며 공천 자격을 회수해? 예라이!

정말 막말을 했으면 또 모른다. 도태우는 단지, 다른 사람의 보통의 관용구(慣用語)를 인용했을 뿐이다.

문재인은 책임 중 일련의 기이한 행동을 했다. ★ 탈북 여부를 강제복송했다. ★ 평양에 가서는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불렀다. ★ 9.19 군사합의도 ★ 김정연에게 USB를 건넬 것도, 다 기이했다. 도태우는 그것을 [혹자]의 말을 빌려 [기이해] 했을 뿐이다.

대중 연설에서 이 정도의 수사학을 구사했다 해서 [막말]? 그래서 [정치적 구형(舊形)]을? 더더군다나 명색이 아군이라는 쪽이?

#### [영거주층 어중간]으로 이길 수 있나

한국 [비(非)좌파]엔 어차피 두 개의 다른 길이 있다. [정통 자유주의 노선]과 [어중간한 노선].

이걸 물어두고 가다가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건드려 상처를 내면, 신뢰 관계는 깨진다. 비용은 당연히, 전적으로, [건드린 쪽]이 물어야 한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 후보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라 했다. (뉴데일리 칼럼)에 대한 그의 행태와 상반된다.

뉴데일리는 2월 27일 <경기동부연말, 국회 입성하면 민주당 배가르고 나올 것>이란 제목의 [유근일 칼럼](아래 QR코드)을 게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칼럼을 공격성전거점 위반으로 [인터넷정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본지는 아래 요지의 반박 문서를 제출했다.

1. 이재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칼럼]의 [은유·풍자]를 문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3.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인과 공당이다. 일면인보다 엄격한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심의>는 3월 13일, 이 칼럼에 [주]의 추구를 결정했다. 본지는 즉각 제심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 있다. 선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의신청을 철회하라.

유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유근일 칼럼: 이재명은 국파 속주인가

경기동부연말, 국회 입성하면 민주당 배가르고 나올 것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3월 17일 게재 되었습니다.